

# 조사위 믿고 손 놓았다가...부실 보고서 낙장 대응



## 5·18 진상보고서 이대론 안 된다

### <1> 모두가 방관한 진상조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 위원회(진상조사위)가 다음달 27일 내용을 '종합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최초의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날이 들어가는 등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증한 5·18 정식 조사보고서이자 역사자료다.

하지만 진상조사위가 내놓은 17개 직권조사 사항 개별보고서는 왜곡·편향에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이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가 잘못돼 있는 상태에서 종합보고서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광주일보는 진상조사위 실태를 비롯해 종합보고서의 문제와 대안을 짚어본다.

5·18 진상조사위의 부실한 조사결과는 이미 예견됐음에도 광주지역 사회가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년간의 진상조사위 활동기간 동안 부실조사와 조사위 내부의 난맥상이 지속적으로 드러났음에도 오월단체와 광주지역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부실하고 또다른 왜곡과 편향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개별조사보고서가 나오거나 늦장대응을 한 탓에 제대로된 조사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18진상조사위는 27일 오후 4시부터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126차 전원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원위원회도 국민참여가 가능해 5·18 기념재단 관계자 등이 방청했다. 진상조사위 전원위원회의의 국민참여 신청은 지난 20일 열린 123차 전원위원회가 처음이었다.

5월단체 내용에 시민단체 모르쇠 왜곡·편향 대응 못하고 허송세월 조사위 배타적 운영, 무관심 자초 본보 꾸준한 지적에도 무대책 일관

중대한 의사결정이라든가 공개 시 심의에 영향을 미칠 경우 방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4년 동안 열린 진상조사위 전원위원회에 오월 단체나 광주지역 시민사회들이 방청한 것은 4차례 뿐이다.

개별조사보고서의 부실 논란 등이 일고 나서야 오월관련 단체들과 광주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이 점에서 무관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상조사위에 대한 지역민의 염원은 남달랐다. 신군부 정권의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 관련자들의 비협조, 정치적 타협 등 그동안 5·18의 진실은 아픔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민들은 5·18의 진실을 국가차원에서 나서서 조사해 주길 원했다. 특히 그동안 보수 정권과 보수정권 극우세력들이 5·18을 끊임없이 왜곡·편향하며 혼들어 대고 있었다는 점이다.

진상조사위의 부실조사는 조사 초기부터 예견돼 왔다.

광주일보는 5·18진상조사위의 활동초기부터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오월 단체와 광주지역 사회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출범 10개월 뒤 '출범 10개월...기대 못미친 5·18진상조사위' (광주일보 2020년 10월 26일자 6면)라는 제목으로 애초 계획대로 2020년 9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보고서들을 한 건도 마무리 못한 실정과 조사위원간의 소통부재를 꼬집었다.

또 초기 진상조사위가 세운 조사계획이 미뤄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4개월 뒤 광주일보는 '본조사는 시작도 못했다...언제까지 자료 정리'란 제목의 보도(광주일보



오월영령 혼 달래는 씻김굿

5·18 최후 항쟁일인 27일 오후 옛 전남도청앞에서 열린 44주년 민주항쟁 부활제에서 오월영령의 혼을 달래주는 씻김굿 공연이 열리고 있다.

2021년 2월 18일자 3면)로 진상조사위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2020년 하반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활동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당시 진상조사위는 2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본 조사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기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분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출범 2년을 맞아서는 진상조사위가 밝혀내야 할 핵심조사 내용인 발표책임자와 행불자 등에 대한 조사가 미비 한 점(성과 없는 5·18 암매장·행불자 조사...진상 규명 '허송세월', 광주일보 2021년 12월 15일자 6면)도 지적했다.

당시 진상조사위는 발표명령 체계의 실제, 비무장 민간인 살상 사건 등을 밝히면서 당시 전두환씨

가 광주 진압작전을 건의한 문서에 'Good Idea' (굿 아이디어)라고 발언한 사실, 5·18 당시 '진돗개 하나' 발령 사실 등도 공개했지만,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내용을 밝힌 수준이었다.

또 당시 송선태 위원장은 2022년 6월께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난해 청문회는 결국 열지 못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는 진상조사위는 직권조사 항목 21개 조사를 평균은 3년 동안 58%에 그쳤다는 지적(활동기간 1년여 남은 5·18진상조사위, 3년간 조사를 58% '지지부진', 2022년 10월 11일자 6면)을 받기까지 했다.

이러한 지적이 계속됐지만 오월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그동안 진상조사위의 활동에 대한 감시

나 지적을 하지 않았다.

오월단체는 공법단체가 된 후 내용으로 이권싸움에 빠져 자체적으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고, 시민사회단체와 대립각을 세우며 진상조사위의 활동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나마 5·18기념재단 측이 진상조사위에 활동에 대한 문의를 했지만, 진상조사위는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 등을 내세우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해왔다.

광주지역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라는 점에서 당연히 조사결과가 잘 나오겠지'라는 무책임한 신뢰만 갖고 있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 마약진통제 21만정 셀프처방 투약한 의사

광주지검, 60대 불구속기소 판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전남과 전북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마약용 진통제 21만여정을 스스로 처방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60대 의사가 법정에서 서게 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진통제 21만4034정을 직접 처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8000여 만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분량이다.

A씨는 전남과 전북 등의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는 속직 페이닥터로 지내면서 범행을 저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년이 채 되지 않은 범행기간 하루에 300여정이 넘게 투약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타인에게 약을 팔거나 건넸는지 등을 수사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의약품을 모두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마약 중독 여부를 판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인 광주시립 정신병원에 중독판별검사를 의뢰했다.

마약 중독으로 판정되면 A씨의 의료인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 상가 화장실에 영아 시신 유기 광주 20대 여성 5일 만에 검거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5일 만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7일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된 시신은 출산 직후의 영아로 추정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영아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 삼청교육대 피해자, 정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광주지법 "1억2천만원 지급하라"

광주지법 민사4단독(이재석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63)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A씨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1980년 10월 13일 광주시 동구의 한 주점에서 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A씨는 같은해 내려진 계엄 포고에 따라 영장도 없이 11월 1~18일 38사단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 교육을 받았지만 미순화자로 분류돼 5사단으로 끌려가 2년간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계속 근로봉사를 했다. 이후 A씨는 감호소를 거쳐 1982년 5월에 출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05년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피해보상을 신청해 2007년과 2008년 두차례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신적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결정서에는 계엄포고 효력과 위법성은 2018년 대법원 판단에서 확인됐다"면서 "대법원이 2018년 위헌 결정을 했더라도 A씨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법률대리인 김수지 변호사는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적절한 행사를 견제하는 국가배상제도의 취지상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A씨와 다른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역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hb@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